

경유차 환경기준 맞추기 버겁다!

정유산업 설비부담 2조5000억원 ... 세금감면 등 정부지원 촉구?

정부가 경유승용차 판매를 2005년부터 허용키로 함에 따라 정유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맞추려면 탈황시설 등 고도화 설비를 갖춰야 하지만 업계 현실 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는 교통세 감면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SK와 LG-Caltex정유 등 정유업계는 경유승용차에 맞도록 경유의 황 함유량을 30ppm으로 낮추려면 업계 전체로 2조5000억원대의 투자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 휘발유의 판매증가와 수입기업들의 시장 잠식 등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어 투자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석유협회는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막대한 시설투자를 감수할 수 있으나 다만 자동차 연료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유로4(황 함유량 50ppm) 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되 2005년부터 이 기준의 승용차를 공급하면 특소세의 50%를 감면키로 한 만큼 정유업계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Chemical Journal 2003/04/04>